

연구논문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간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통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윤 건**
김 철 우***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간 관계와, 이 과정에서 사회통합이 실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인식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역량이 사회안전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통합적 요소들이 매개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회통합의 매개효과는 신뢰, 참여, 연결성, 정체성, 시민성, 계층 이동성에서 나타났고, 소수자 포용성과 갈등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참여의 경우에는 부정적 매개가 나타났다. 정부역량은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었으나 참여는 사회안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의 의미를 논의하고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정부역량, 사회통합, 사회안전성, 사회위험]

* 이 논문은 2020년도 한신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로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관리규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았음. 또한 이 논문은 2020년도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발전시킨 것으로, 이론적 논의에서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정부역량 지수화 방안 연구(2016, 2017))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활용함

** 제1저자, 한신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kyoon2010@hs.ac.kr)

*** 교신저자,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cwkim@gachon.ac.kr)

1. 서론

우리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과거보다는 안전이 꾸준히 확보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실제 통계청이 격년주기로 조사하는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를 살펴보면, 안전하다고 답한 비율이 2008년에 8.2%에서 2020년에 31.8%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20). 그럼에도 재난과 사고는 높은 상호의존성과 체계의 복잡성 증가의 결과물로 준비와 대응이 쉽지 않은 형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다(이재송·김유경·최열, 2017; 정영철·최익수·배용근, 2016).

최근에 코로나19 시대에 직면하면서 우리 사회는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현시대에 사회의 안전성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위험사회는 불안감을 조장한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충격을 가져다 준 대형 재난안전사고를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정부는 재난안전사고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가 적절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의 불안정성은 지속되거나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역량은 정부성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다. 정부역량이 높다면 정부의 성과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과 같은 안전 상황에서는 사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적 성과가 될 것이다. 정부역량이 사회안전성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높은 정부역량이 높은 사회안전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낮은 정부역량은 낮은 사회안전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과 그 결과를 보면, 정부역량의 국가 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사회통합적 요소들이 중요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통합은 신뢰, 참여, 연결성, 정체성, 시민성, 포용, 갈등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이 사회의 하나됨의 양상으로 사회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사회 구성원 간 신뢰가 충분하면 범죄율이 낮아질 수 있고 사회참여나 정치참여가 활발하면 안전문제들이 빠르게 해결될 수도 있다. 포용이나 갈등관리는 과격한 시위나 폭동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할 수도 있다. 실제 재난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부기관의 정책과 관리감독이 효과적으로 사회 안전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 즉 사회 구성원들의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이환성,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간 관계와, 이 과정에서 사회통합이 실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간 관계, 그리고 사회통합의 매개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사회통합의 다양한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안전성이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인식을 측정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일정한 논의 사항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정부역량

정부역량이라는 개념은 역량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량은 평균 이상의 탁월한 성과의 원인으로 정의되며, 조직성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목적성을 갖는 개념이다(행정안전부, 2008; Boyatzis, 1982; Mirabile, 1997; Spencer et al., 1993). 역량의 구성요소는 기술이나 지식뿐만 아니라(Mirabile, 1997; Lassey, 1998), 태도나 특성까지도 포함되기도(Spencer et al., 1993, 행정안전부, 2008) 한다.

또한 역량은 조직 자체의 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닌 조직 구성원의 특성과 능력으로 이해되었으나, 점차 조직 차원으로 확장되었다(이승중·윤두섭, 2005). 이러한 개념의 확장은 국가 차원에서의 역량 개념을 활용하는 연구나 중앙 및 지방정부에 관련된 연구에서도 동일하다. 정용덕(2006)은 국가역량은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부문까지 포함하여 논의하며, 문명재·주기완(2007)의 연구에서는 정부역량이 '사회 부문까지 포괄한 한 나라의 총체적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정부 자치역량(최봉기 외, 1993), 지방자치단체 내부조직역량(김병국·권오철, 1999), 지방정부 혁신역량(장원호·최미옥, 2005)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정부 내부의 조직역량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소와 같은 외부역량까지 포함하여 역량을 정의하고 분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역량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거버넌스역량이 있는데 이는 공공문제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집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넓은 차원의 역량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용덕, 2006; Innes & Booher, 2002). 또한 조직 간 관계적 차원을 의미하는 관계역량(Innes & Booher, 2002), 기획, 결정, 집행, 평가 등, 정책과정 별로 필요한 정책역량(Denis et al., 2015)이라는 개념을 제시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라는 목적성을 갖는 역량의 개념을 바탕으로, 조직차원의 정부내외적요소를 포함하여 정부역량을 정의하고자 한다. 즉 정부역량을 정부가 행정목적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이후 결정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행정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부역량을 측정하느냐이다.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합법성, 정직성, 효율성, 효과성 등 어떠한 공직가치를 추구하는지 알아야 하며, 이러한 가치에 기반을 두고 정부의 세부목표가 정해진다. 정부는 이렇게 다양한 목표에서 최상의 결과를 달성할 때, 추구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국가의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부역량에 대해 고려해보면,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라 취약국에서는 정부의 기본기능인 조직, 인사, 재정을 포함한 국정관리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과 조직의 역량이 요구된다(전문역량). 개발도상국 단계에서는 전문역량과 함께, 공무원과 정부부처가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정책에 대한 수용성 확보에 요구되는 도덕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윤리역량). 마지막 단계인 선진국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분열과 양극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에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가 대내외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수립 및 집행의 효과성뿐만 아닌 시민참여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협치역량).

2. 정부역량과 사회통합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는 포용(inclusion), 통합(integration), 응집(cohesion)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왔다.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으로 정의할 경우 정치·사회적 참여 기회와 경제적 배분 등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대표적 계층이 누구인가를 파

악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배제의 대상을 빈곤층(최재성 외, 2009), 장애인(이익섭·최정아 2005), 청소년(강영배, 2009), 노인(최재성 외, 2007), 여성(배미애, 2007), 저숙련 외국인근로자(김순양 외, 2008) 등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처한 경제적 불평등의 상황과 이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한다.

사회통합을 법적·정치적 통합의 의미로 사용하면 이민자 및 소수인종 등 이질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내국인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공존(coexistence)하거나 내국인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동화(assimilation)되는 과정이 중요시된다(Bosswick & Heckmann, 2006: 4-6). 국내 문헌에서도 사회통합을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의 수립을 위한 과정으로 보았고(고상두, 2012), 허찬행과 심영섭(2014)은 사회통합은 동화, 편입, 융합 등의 유사 개념 중에서, 융합보다는 편입을 현실적인 사회통합 모델로 제시하였다. 이상윤(2014)은 다문화주의, 차별적 배제, 동화주의 등 Castles & Miller(1998)가 제시한 사회통합 모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외국인정책 관련 법령을 분석하였다. 이진석(2014)은 정부주도의 보호와 동화에 입각한 탈북자정책을 비판하면서 문화적 위계구조와 불평등 해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으로서의 사회통합은 구조적 분화가 심화되는 근대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에 핵심이 있다. 관련 연구들은 사회통합에서 결속강화를 강조(장용석, 외, 2012)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공통의 가치와 규범들(김태원, 2010),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의 비전(신중섭, 2013) 등을 통해 구성원들이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결합해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개인의 분열행위 및 충돌이 최소화되는 사회이며(이건, 2013), 이를 위해 제도권과 시민사회가 가진 갈등관리역량을 사회통합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판단한다(이재열 외,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구성원들 간에 관계적 속성으로, 공통의 가치와 일체감을 기반으로 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 그리고 책임의식이 발휘되어 개인과 집단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갈등이 조화롭게 극복되어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사회통합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정부역량이 사회통합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전문역량과 관련하여, 이주하(2018)는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 양식으로 대표되는 정부역량이 사회통합의 대표적 저해요인으로 볼 수 있는 사회불평등 해소에 주요한

변수라고 본다. 정부조직의 역량을 인적요인, 조직운영, 직무능력으로 정의하고,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거버넌스가 포함된 사회적 자본을 종속변수로 보았을 때, 정부역량은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병·양덕순, 2017),

정부의 윤리역량 관련해서는, 정부의 윤리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윤건·서정옥, 2018). 윤건·박준(2019)의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은 정부의 소통, 조정, 공정, 청렴 등의 특성을 의미하는 거버넌스 역량과 행복 사이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협치역량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상섭(2017)은 사례연구를 통해 사회적 집단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최병학(2014)은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구축이 지역에서의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주요한 기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윤두섭과 오승은(2007)은 신뢰, 연계망, 제도 및 규범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과 지방정부 외부역량의 상호 인과적 관계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후 추가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3. 정부역량, 사회통합과 사회안전성

사회안전이라는 개념을 조사하기 앞서 안전의 의미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안전은 위험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여기서 위험은 해로운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나 그 확률로 정의할 수 있다(Quarantelli, 1988; WHO/EHA, 2002). 따라서 안전과 위험은 서로 상반되거나 대치되는 개념으로, 서로를 정의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안전은 위험과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분리된 개념이나 또는 서로의 정도 차에 따른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보느냐의 논의가 가능하다(설동훈, 1998). 두 가지 시각 모두 한계가 존재한다. 분리된 개념으로 볼 경우, 안전과 위험의 정도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이 있으며, 연속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두 개념의 중간 정도에 안전하지도 위험하지도 않은 상태가 존재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은 위험의 정도 차에 따른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개념적이고 이론적 구성에 유용하다는 서재호와 이승종 (2012)의 주장에 따르기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안전은 안전이 개인차원에서 집합적 수준으로 확대된 개념이며, 안전의 개념으로 접근해 볼 때, 사회위험이 없는 상태이다. 여기서 사회위험이란 특정한 위험원이 사회수준으로 확대되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한다(임동진, 2016). 이러한 위험의 정도에 대한 분석은 주로 기술적인 분석과 심리적 관점의 분석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다. 기술적 위험분석은 위해의 발생가능성과 예상되는 손실의 심각성의 곱으로 수식화할 수 있다(서재호, 2010; IRGC, 2008). 이러한 기술적 분석은 객관적이고, 확률적인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는 반면, 사회구성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처한 환경 등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이재송·김유경·최열, 2017). 심리적 관점에서의 사회안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위험자체가 정치,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라는데 기인한다. 즉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위험의 본질과 정도에 대한 판단이 사회안전성을 진단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안전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정부역량과 사회통합은 이러한 사회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재호와 이승종(2012)의 연구에서는 경제적(소득), 사회적(실업, 여성인구), 정부관리(검거율, 안전예산), 전국요인(대북요인) 등이 주민의 사회안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유의미한 결과로는 전국요인 중 대북관계가 안정적일 때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인식이 증가한 것이 있었다. 또한 충남지역 시민과 공무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연구에서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본, 안전교육 및 제도, 사고 후 안전인식, 안전불감증, 신분, 성별, 연령의 순으로 사회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동진, 2016). 서울과 부산의 총 3070명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도시안전과의 연구에서는, 사회안전 인식이 서울에서는 성별,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과, 부산에서는 가구원수와 주거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송·김유경·최열, 2017). 국외연구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국민들의 환경과 사회에 대한 관심도(Krewski et al., 2008), 청년층, 여성, 저소득층, 고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Costa-Font et al., 2009, Holzman et al., 2001, Rasanen et al., 2012, Savage, 1993). 비슷한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과 정부의 질을 독립변수로 국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에서는, 단체활동 참여와 공동체 이익 존중, 지역 소속감과 공무원의 서비스태도, 중앙정부 신뢰가 종속변수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예나·최영출, 2020).

Ⅲ. 연구설계

1. 연구 분석틀과 가설

〈그림 1〉 연구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의 관계, 그리고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사회통합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한다. 우선 정부역량은 전문역량, 협치역량, 윤리역량으로(윤건 외, 2018; 윤건·정소운, 2018), 사회통합은 결속, 포용, 갈등으로(윤건·박준, 2019) 구성하였다.¹⁾ 사회안전성의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시군구, 읍면동과 같이 지역사회 안전성 인식을 포함하였다.²⁾ 사회통합의 경우 결속은 신뢰, 참여, 연결성, 정체성, 시민성으로 포용은 소수자 포용성, 계층 이동성으로, 갈등은 경제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은 (+)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에서 사회통합이 매개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1: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에 신뢰가 매개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1) 윤건·박준(2018)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통합의 구성은 사회통합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으로서 'social cohesion', 'social inclusion', 'social integration' 관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social cohesion은 공동체적 응집과 결속, social inclusion은 배제의 반대로서의 포용, social integration은 갈등의 반대로서의 공존을 강조한다.

2) 이러한 구성은 전체에 대한 인식과 부분에 대한 인식이 서로 상이하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 가설 2-2: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에 참여가 매개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3: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에 연결성이 매개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4: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에 정체성이 매개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5: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에 시민성이 매개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6: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에 소수자 포용성이 매개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7: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에 계층 이동성이 매개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8: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에 경제적 갈등이 매개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9: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에 사회적 갈등이 매개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2. 분석 자료와 변수의 측정

가설 검증을 위해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공신력 있는 자료이며 행복감이나 우울감, 안전성 등의 주관적 웰빙 항목들, 사회 및 정치참여, 사회적 소통과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포용성 등을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통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경우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구 추출을 위한 확률비례계통추출, 가구 추출을 위한 계통추출, 가구 내 적격 가구원 추출을 위한 전수조사 방식 등을 활용한다.

〈표 1〉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개요

조사목적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및 태도 조사
조사대상		2019년 현재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조사방법		면접조사(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조사내용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 사회참여, 정치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관용성(사회적 포용), 사회보장
표본 설계	표본추출틀	통계청 2017년 등록센서스 조사구 결과
	표본크기	8,000명
	표본추출방법	1차 확률비례계통추출에 의한 조사구 추출, 2차 가구 계통추출, 3차 적격 가구원 전수조사
조사기간		2019년 9월 1일~10월 31일
조사기관		주관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실시 기관: 한국리서치

2019년 조사된 8000개 샘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2〉 참조),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간 높지만 거의 동일한 비율이며, 연령의 경우 50개가 22.76%로 가장 높고 40대 22.11%, 20대 19.2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령별로 큰 편차가

나타나지니 않는다. 가구 소득의 경우에는 600만원 이상이 21.41%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고, 400만원대가 18.54%, 300만원대가 17.8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이 49.94%, 고졸 40.44%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고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각 변수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부록 1> 참조) 우선 사회안전성은 ‘각 대상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하여 우리 사회 전체, 시군구, 읍면동 등, 3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측정방식은 불안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 안전 인식을 직접 묻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재열 외(2005)는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11점 척도로 묻는 것이다.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반대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대리하여 묻는 방식 대신 직접적으로 아전에 대해 묻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의 경우에는 2년마다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데, 이 경우에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측정하고 있다. 요인분석 결과 각 지표가 모두 0.8 이상의 요인적재치를 나타내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신뢰도 계수는 0.868로 나타나 세 지표를 사회안전성의 측정치로 집계하여 활용하였다.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
합계		8,000	100.00
성별	남자	4,011	50.14
	여자	3,989	49.86
연령	19~29세	1,542	19.27
	30대	1,516	18.95
	40대	1,769	22.11
	50대	1,821	22.76
	60~69세	1,352	16.9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63	4.54
	100~200만원 미만	603	7.54
	200~300만원 미만	1,043	13.04
	300~400만원 미만	1,426	17.82
	400~500만원 미만	1,483	18.54
	500~600만원 미만	1,369	17.11
	600만원 이상	1,713	21.41
학력	초졸 이하	303	3.79
	중졸	467	5.84
	고졸	3,235	40.44
	대졸 이상	3,995	49.94

정부역량의 측정은 윤건·정소윤(2018)의 측정방식을 따랐다. 전문역량은 ‘각 기관이 자신의 맡은 일을 잘 수행한다고 믿는 정도’에 대하여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세 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협치역량의 경우 ‘집단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정도’에 대하여 중앙정부 부처 상호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지방정부 상호 간, 정부와 시민단체, 정부와 전문가집단, 정부와 기업 등 7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윤리역량의 경우 ‘각 기관이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하여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세 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전문역량, 협치역량, 윤리역량의 경우 각각이 적절한 요인적재치와 신뢰도계수를 나타내었으나, 세 요소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나의 정부역량 개념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 요소의 측정치 간 신뢰도계수가 0.823으로 나타나 하나의 정부역량 측정치로 집계하여 활용하였다.

사회통합의 측정은 윤건·박준(2019)의 측정방식을 활용하였다. 결속의 경우 신뢰는 ‘각 집단에 대한 신뢰 정도’에 대하여 처음 만난 낯선 사람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두 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참여의 경우 ‘각 사회 단체에서의 활동 정도’에 대하여 정당, 노조 등, 시민단체, 지역사회 공공모임, 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 6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연결성은 ‘집단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하여 가족 간 소통, 직장 구성원 간 소통, 이웃 간 소통, 세대 간 소통 등, 4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정체성의 경우 자긍심 혹은 소속감에 대하여 국가,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4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시민성은 투표 참여, 세금 납부, 법규칙 준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 사회 또는 정치 단체에서의 활동, 다른 사람 의견 존중, 윤리적 구매, 군복무 등의 중요성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결속의 하위요소들 각각은 적절한 요인적재치와 신뢰도계수를 나타내었으나, 전체 결속의 하위 요소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하나의 결속 개념으로 묶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의 하위요소별로 하나의 측정치로 집계하여 활용하였다.

갈등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각 집단 사이의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하여, 경제적 갈등은 빈곤층과 중상층, 보수집단과 진보집단,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사회적 갈등은 고령층과 젊은층,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종교, 내국인과 외국인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경제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의 경우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하나의 요소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계수가 0.658로 나타나 하나의 갈등 측정치로 집계하여 활

용하였다. 포용의 경우 소수자 포용성은 ‘각 대상과의 일정한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 대하여 장애인, 한 부모 가정 자녀, 외국인 이민자 등,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계층 이동성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하여 자신, 자신의 자녀 등,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소수자 포용성과 계층 이동성 간 요인 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다.

V. 분석 결과

1. 기술분석 결과

먼저 기술분석 결과를 보면 사회안전성 인식은 10점 만점에 5.77점으로 나타나 중간(5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역량에 대한 인식은 4점 만점에 2.26점으로 중간(2.5점)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통합과 관련된 요소들의 수준을 보면 우선 결속의 경우 시민성을 제외하고는 낮게 나타난다. 포용의 경우 소수자 포용성은 5점 만점에 3.03점으로 중간(3점) 수준을 보이며, 계층 이동성 인식은 중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 갈등 수준의 경우 4점 만점에 2.82점으로 중간보다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기술분석

변수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종속	사회 안전성	전체사회안전성	8,000	5.23	2.049	0	10
		시군구안전성	8,000	5.95	1.825	0	10
		읍면동안전성	8,000	6.13	1.807	0	10
독립	정부 역량	전문역량	8,000	2.31	0.590	1	4
		협치역량	8,000	2.24	0.527	1	4
		윤리역량	8,000	2.22	0.597	1	4
매개	결속	신뢰	8,000	2.09	0.508	1	4
		참여	8,000	1.29	0.552	1	5
		연결성	8,000	2.76	0.518	1	4
		정체성	8,000	2.79	0.547	1	4
		시민성	8,000	5.60	0.835	1	7
	포용	소수자 포용성	8,000	3.03	0.845	1	5
		계층 이동성	8,000	2.61	0.659	1	4
	갈등	경제적 갈등	8,000	2.98	0.463	1	4
		사회적 갈등	8,000	2.65	0.524	1	4

2. 상관분석 결과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종속변수인 사회안전성에 대하여 독립변수인 정부역량과 매개변수인 사통합 요소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참조) 사회안전성과 특히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정체성 인식으로 상관계수값이 0.303에 이른다. 즉 정체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사회가 보다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반면 정체성을 낮게 인식하는 응답자들일수록 그만큼 사회안전성 인식은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4〉 상관분석 결과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종속 변수	1. 사회 안전성	1.000									
독립 변수	2. 정부 역량	0.198 ***	1.000								
매개 변수	3. 신뢰	0.091 ***	0.164 ***	1.000							
	4. 참여	-0.032 **	0.116 ***	0.137 ***	1.000						
	5. 연결성	0.090 ***	0.113 ***	0.216 ***	0.053 ***	1.000					
	6. 정체성	0.303 ***	0.232 ***	0.105 ***	0.063 ***	0.192 ***	1.000				
	7. 시민성	0.180 ***	0.091 ***	0.034 **	-0.066 ***	0.137 ***	0.266 ***	1.000			
	8. 소수자 포용성	0.078 ***	0.010	-0.032 **	0.037 **	-0.019	0.033 ***	0.175 ***	1.000		
	9. 계층 이동성	0.186 ***	0.231 ***	0.159 ***	0.090 ***	0.189 ***	0.410 ***	0.146 ***	-0.006	1.000	
	10. 갈등	-0.028 *	-0.189 ***	-0.139 ***	-0.050 ***	-0.012	-0.038 **	0.108 ***	0.078 ***	-0.095 ***	1.000

*: $p < .05$ **: $p < .01$, ***: $p < .001$

3.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다음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통제변수로 구분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포함하면서 모델 적합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정

부역량만 포함하는 모델 1에서는 정부역량이 사회안전성에 통계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기에 매개변수까지 포함한 모델 2에서도 정부역량은 사회안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개변수 중에는 연결성과 갈등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사회안전성과의 관계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통제변수까지 포함한 모델 3에서도 이러한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모델 1에서 모델 3으로 갈수록 R2값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수 구분 (종속변수: 사회안전성)		모델 1		모델 2		모델 3	
		β	S.E.	β	S.E.	β	S.E.
독립	정부역량	0.197***	0.013	0.124***	0.013	0.125***	0.013
매개	신뢰			0.045***	0.011	0.039***	0.011
	참여			-0.069***	0.011	-0.070***	0.011
	연결성			0.006	0.011	0.013	0.011
	정체성			0.228***	0.012	0.232***	0.012
	시민성			0.084***	0.013	0.085***	0.013
	포용성			0.059***	0.011	0.051***	0.011
	이동성			0.050***	0.012	0.048***	0.012
	갈등			-0.002	0.013	0.001	0.011
통제	성별					-0.115***	0.021
	연령					-0.013	0.009
	소득					-0.019	0.006
	학력					0.019	0.016
F		324.55***		132.15***		103.29***	
R ²		0.039		0.130		0.144	
Adj. R ²		0.039		0.129		0.143	

***: $p < .001$

4. 매개효과 검증

마지막으로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간 관계에서 사회통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그들의 매개효과 방법론에 따르면 세 가지 검증이 필요한데, 첫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둘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다중회귀모형에서 매개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한다. 매개효과가 검증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검증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마지막 다중회귀모형 검증의 경우 매개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완전한 매개를 의미하고, 독립변수의 계수값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경우 부분적 매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한다. 총 8개의 사회통합 요소들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소수자 포용성과 갈등을 제외한 6개의 요소들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참여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 매개효과가 나타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6〉 사회통합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변수 (사회통합) 구분		1단계(정부역량 →) 사회통합)			2단계(정부역량 →) 사회안전성)			3단계 (정부역량 + 사회통합 →) 사회안전성)					Sobel Test
		Coef.	S.E.	F	Coef.	S.E.	F	정부역량		사회통합		F	
								Coef.	S.E.	Coef.	S.E.		
결속	신뢰	0.190 ***	0.013	220.1 ***	0.230 ***	0.013	324.6	0.218 ***	0.013	0.060 ***	0.011	177.5 ***	5.1 ***
	참여	0.135 ***	0.013	109.1 ***				0.237 ***	0.013	-0.05 6 ***	0.011	175.5 ***	-4.6 ***
	연결성	0.131 ***	0.013	102.7 ***				0.221 ***	0.013	0.069 ***	0.011	182.5 ***	5.3 ***
	정체성	0.270 ***	0.013	454.5 ***				0.156 ***	0.013	0.272 ***	0.011	489.1 ***	15.9 ***
	시민성	0.093 ***	0.011	67.4 ***				0.212 ***	0.013	0.188 ***	0.012	280.5 ***	7.4 ***
	포용	소수자 포용성	0.012	0.013				0.9	0.229 ***	0.013	0.076 ***	0.011	187.4 ***
계층 이동성		0.269 ***	0.013	449.9 ***				0.190 ***	0.013	0.149 ***	0.011	254.7 ***	11.3 ***
갈등		-0.21 9 ***	0.013	294.0 ***				0.232 ***	0.013	0.010	0.011	162.8 ***	-

***: p<.001

〈표 7〉 가설검증 결과

구분	내용	결과
가설 1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은 (+)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가설 2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에서 사회통합이 매개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 2-1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에 신뢰가 매개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가설 2-2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에 참여가 매개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가설 2-3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에 연결성이 매개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가설 2-4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에 정체성이 매개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가설 2-5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에 시민성이 매개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가설 2-6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에 소수자 포용성이 매개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기각
가설 2-7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에 계층 이동성이 매개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가설 2-8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에 갈등이 매개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기각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과의 관계, 그리고 두 변수 사이에서 사회통합이 매개적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검증 결과 정부역량이 사회안전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통합적 요소가 매개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 또한 확인되었다. 사회통합의 매개효과는 신뢰, 참여, 연결성, 정체성, 시민성, 계층 이동성에서 나타났고, 소수자 포용성과 갈등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참여의 경우에는 부정적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소수자 포용성의 경우 정부역량에의 영향에의 방향은 (+)로 나타났으나,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부역량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반드시 소수자 포용성이 낮다고 인식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우리 국민이 소수자 포용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정부가 공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사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술통계에서는 소수자 포용성에 대한 인식이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국민이 소수자 포용성을 그리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3단계에서는 소수자 포용성이 사회안전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소수자 포용성 인식이 낮을수록

사회안전성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소수자 배제는 참여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져(여유진, 2017: 51), 결국에는 사회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갈등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정부역량이 갈등에 통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정부역량 인식이 높을수록 갈등 인식은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3단계에서 갈등이 사회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즉 갈등 인식이 높다고 해서 사회안전성 인식이 낮아지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갈등이 사회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갈등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다. 갈등 인식은 4점 만점에 평균 2.82점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간 수준인 2.5점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사회 안전성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갈등이 참여하여 극단적인 폭력적인 상황으로 전환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갈등의 기능주의적 관점의 해석이 가능하다. 즉 높은 수준의 갈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나, Lewis A. Coser의 논의에서와 같이 사회가 분화되고 각 단위들이 기능적으로 상호의존적이면 갈등의 빈도는 높아져도 강렬성과 폭력성은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김문길, 2017: 38).

마지막으로 참여의 경우를 살펴보자. 정부역량은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었으나 참여는 사회안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정부역량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참여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안전성 인식은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참여를 통해 위험 정보가 많아지게 되면,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김주경 외(2018)의 실증연구에서는 위험인식과 주민참여가 (+)의 관계로 나타나지만 참여와 원자력 수용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의 관계가 나타나고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해석은 역의 인과성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즉 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할 수록 참여를 통해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필요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어떠한 해석이든 참여가 가지는 사회통합적 속성이 이중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과의 관계에서 사회통합이 매개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정책적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정부역량이 사회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매개변수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는 정부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이 사회안전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사회

통합을 높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정부역량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통합이 사회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된 만큼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사회통합을 목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성과 같이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또 다른 목적의 수단이자 도구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역량과 사회안전성 사이의 관계와 그 사이에서의 사회통합의 매개적 역할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제 이러한 관계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본 논문에서의 측정이 인식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개념을 경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측정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경성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2차 자료 활용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개념에서 측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선행연구 기반이 미흡하다. 다만 이러한 2차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가 8,000 샘플로 상당한 규모이며, 국가승인통계로서 데이터 질적 수준이 우수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 향후 지속적인 측정과 활용을 통해 해당 측정방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쌓아 갈 필요가 있다.

셋째,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사회통합의 제 요소들이 하나의 사회통합 개념으로 묶이지 않아 각 요소별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통합 개념은 윤건·박준(2019)의 연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사회통합 개념을 구성하고 측정할 뿐 실제 해당 개념이 요인분석을 통해 하나로 묶이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향후 사회통합에 대한 실증 연구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개념으로 측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측정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영배. (2009).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 및 정책에 관한 고찰. 『청소년복지연구』, 11(4), 101-127.
- 고상두. (2012). 이주자 사회통합모델의 비교분석 : 네덜란드, 독일,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6(2), 241-264.
- 김문길. (2017). 사회갈등 및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7(3): 37-49.
- 김병국·권오철. (1999). 「지방자치단체 내부조직역량 평가체계의 구축 및 활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 김상섭. (2017). 다문화 공공갈등의 전개와 지방정부 대응: 이슬람사원 건축허가를 둘러싼 갈등 사례연구. 『지방정부연구』, 21(3), 289-312.
- 김수병·양덕순. (2017).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본 형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2(1), 199-237.
- 김순양 외. (2008).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와 정책적 대응. 『아태연구』, 15(2), 1-30.
- 김용하. (2013).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 정책과제. 『한국응용경제학회』, 15(2), 31-59.
- 김주경·김영곤·강제상. (2018). 원자력발전소 지역주민의 참여가 수용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공공관리학보』, 32(3): 331-347.
- 김태원. (2010). 다문화현상에 대한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민족문화논총』, 44, 389-423.
- 문명재·주기완. (2007). 정부의 규모 (Size), 기능 (Scope), 역량 (Strength)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5(3), 51-80.
- 배미애. (2007). 여성의 사회적 배제와 지역 차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24(1), 151-191.
- 서재호. (2010). 사회위험의 대응관리에서 사회위험 예방관리로. 『행정포커스』, 86(3): 45-49.
- 서재호·이승중. (2012). 지역주민의 사회안전 및 사회위험 인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8(3): 1-20.
- 설동훈. (1988). 한국인의 위험인식. 『한국사회과학』, 20(1): 22-61.
- 신중섭. (2013). 철학적 관점에서 본 사회통합과 자유주의: 국가 주도의 사회통합을 넘어서. 『사회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경제연구원.
- 여유진. (2017). 박탈의 실태 진단 및 사회통합에 대한 함의. 『보건복지포럼』, 2017(3): 50-58.
- 윤건·박준. (2019). 사회통합지수에 관한 연구: 지표의 구성, 측정 및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8(3): 1-35.
- 윤건·서정욱. (2018). 정부의 윤리성과 사회갈등 간 관계에 관한 실증적 탐색. 『사회과학연구』, 34(4): 59-75.
- 윤건·심우현·박정원·김윤희. (2018). 정부역량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 구성에 관한 연구: 전문·

- 윤리·협치역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3): 143-158.
- 윤진·정소윤. (2018). 「정부역량 지수화 방안 연구(III): 국민과 정부의 참여역량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윤두섭·오승은. (2007).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외부역량에 미치는 영향: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5(1), 165-192.
- 이건. (2013).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이상윤. (2014). 한국 이민·다문화 정책 추진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사회통합측면의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5(3), 175-204.
- 이승중·윤두섭. (2005). 지방정부의 역량에 관한 개념화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3), 5-24.
- 이익섭·최정아(2005).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의의와 한계: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3, 1-27.
- 이재송, 김유경, 최열. (2017).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안전 인식분석: 서울시와 부산시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2(3):215-235.
- 이재열·신창섭·서문기·박두용. (2005). 사회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국민안전의식조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안전학회.
- 이재열 외. (2014).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 21(2), 113-149.
- 이주하. (2018). 전환기적 사회정책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정부학연구』, 24(2), 85-122.
- 이진석. (2014). 탈북자 문제와 사회통합 간의 상관성. 『통일전략』, 14(4),131-157.
- 이환성. (2014). 「국민 안전의식 실태분석 및 안전문화 기반조성 방안」.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임동진. (2016).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수준과 영향요인 분석: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89-114.
- 장용석·조문석·정장훈·정명은. (2012).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가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289-322.
- 장원호·최미옥. (2005). 지방정부혁신역량 구조화 모델: 기든스(A. Giddens)의 구조화 이론을 적용하여. 『지방정부연구』, 9(2), 89-105.
- 정영철·최익수·배용근. (2016). 사회안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의 재난대응 정책.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0(4), 683-690.
- 정용덕. (2006). 거버넌스와 국가역량, 『국정관리연구』, 1(1), 9-35.
- 최병학. (2014). 지방정부 갈등관리의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갈등관리연구』, 1(2), 285-312.
- 최봉기·조용상·이시경·조병희. (1993).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방안: 분석틀의 구성을 중심으로. 『대구경북행정학회보』, 5, 47-72.
- 최예나·최영출. (2020). 사회적 자본과 정부의 질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공공가치

- 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4(3), 325-352.
- 최재성·강영숙·김진욱. (2009).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309-341.
- 통계청. (2020). 『사회조사: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통계청. 2008-2020.
- 행정안전부. (2008). 과학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역량평가: 역량평가 도입 매뉴얼.
- 허찬행·심영섭. (2014). 다문화사회 방송의 사회 통합적 기능에 대한 연구: 법적 규범, 방송사의 행위규범과 편성행위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6(2), 149-17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ollen, K. A., & Hoyle, R. H. (1990). Perceived Cohes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Examination. *Social Forces* 69(2), 479-504.
- Bosswick W. & Heckmann F. (2006) Integration of Migrants: Contribution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Dublin, Ireland: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 Boyatzis, R. E. (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NY: John Wiley & Sons.
- Castles, S. & Miller, M. J. (1998). The Age of Migration. 2nd ed. London: Macmillan.
- Costa-Font, J., Mossialos, E., & Rudisill, C. (2009). Optimism and the Perception of New Risks. *Journal of Risk Research*, 12(1): 27-41.
- Denis, J., Brown, L., Forest, P. Normandin, J., Cambourieu, C., Cannizzaro, V., & Preval, J. (2015). Policy capacity for health system reform. Report to be submitted to Nova Scotia Health Research Foundation.
- Durkheim, E. (1997).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Free Press.
- Holzman, R. & Jorgensen, S. (2001). Social Risk Management: A New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Protection, and Beyond.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8(4): 529-556.
- Innes, J. E., & Booher, D. E. (2002). The impact of collaborative planning on governance capacity.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Planning, Baltimore, November 21-24.
- International Risk Governance Council (IRGC). (2008). An Introduction to the IRGC Risk Governance Framework. IRGC.
- Krewski, D., Lemyre, L., Turner, M. C., Lee, J. E. C., Dallaire, C., Bouchard, L., Brand, K., &

- Mercier, P. (2008). Public Perception of Population Health Risks in Canada: Risk Perception Beliefs. *Health, Risk & Society*, 10(2): 167-179.
- Lassey, P. (1998). *Developing a learning organization*. Kogan Page Publishers.
- Mirabile, R. J. (1997).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competency modeling. *Training and Development*, 51(8), 73-77.
- Quarantelli, E. (1978). *Disaster: Theory and Research*.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Rasanen, P., Nasi, M., & Sarpila, O. (2012). Old and New Sources of Risk: A Study of Societal Risk Perception in Finland. *Journal of Risk Research*, 15(7): 755-769.
- Savage, I. (1993). Demographic Influences on Risk Perceptions. *Risk Analysis*, 13(4): 413-420.
- Spencer, L. M., & Spencer, S. M.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Y: John Wiley & Sons.
- WHO/EHA. (2002). *Disaster & Emergencies Definitions*. Training Package Panafrican Emergency Traininng Centre. Addis Ababa.

□ 부록: 각 변수별 설문문항, 요인적재치, 신뢰도계수

변수		설문문항	요인적재치	Cronbach's α		척도
사회안전성		귀하는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836	0.868		0: 전혀 안전하지 않다 10: 매우안전하다
		귀하는 요즘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군구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937			
		귀하는 요즘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동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905			
정부 역량	전문역량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1) 중앙정부 부처	0.767	0.895	0.731	1: 전혀 믿지 않는다 4: 매우 믿는다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6) 지방자치단체	0.838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7) 공기업	0.813			
	협치역량	귀하는 다음 집단 간에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앙정부 부처 상호 간	0.748	0.791	0.872	1: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귀하는 다음 집단 간에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0.755			
		귀하는 다음 집단 간에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0.749			
		귀하는 다음 집단 간에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지방정부 상호 간	0.718			
		귀하는 다음 집단 간에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 정부와 시민단체	0.717			
		귀하는 다음 집단 간에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정부와 전문가집단	0.798			
		귀하는 다음 집단 간에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 정부와 기업	0.780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앙정부 부처	0.774	0.892	0.744	1: 전혀 청렴하지 않다 4: 매우청렴하다
	윤리역량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지방자치단체	0.848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공기업	0.816			

24 한국조직학회보 (제17권 제4호)

결속	신뢰		귀하는 다음 집단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4) 처음 만난 낯선 사람	0.882	0.804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매우 신뢰 한다		
			귀하는 다음 집단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5) 국내 거주 외국인	0.874					
	참여		귀하는 다음 사회단체에 대하여 활동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1) 정당	0.716	0.800		1: 소속된 적이 없다 5: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 한다		
			귀하는 다음 사회단체에 대하여 활동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2) 노동조합단체, 사업자 단체 또는 직업조합	0.698					
			귀하는 다음 사회단체에 대하여 활동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5) 시민단체	0.784					
			귀하는 다음 사회단체에 대하여 활동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6) 지역사회 공공모임(반 상회, 주민조직 등)	0.607					
			귀하는 다음 사회단체에 대하여 활동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8) 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	0.657					
			귀하는 다음 사회단체에 대하여 활동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9) 사회적 경제조직(사회 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0.777					
	연결성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 간에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가족 간 소통	0.639	0.701		1: 전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4: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 간에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직장 구성원 간 소통	0.719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 간에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이웃 간 소통	0.785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 간에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세대 간 소통	0.758					
	정체성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0.631	0.827		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시도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0.853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시군구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0.891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0.862					
	시민성		일반시 민성	선거 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	0.841	0.872	0.842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7: 매우 중요하다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0.901				
				법과 규칙을 준수한다	0.873				
			능동 시민성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0.776	0.872	0.802		
				사회 또는 정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0.708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한다	0.733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적이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한다	0.796				
				국가 위기 시 가까이 군복무한다	0.723				

갈등	경제갈등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빈곤층과 중상층 간의 갈등	0.677	0.863	0.695	0.658	1: 전혀 심하지 않다 4: 매우 심하다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보수집단과 진보집단 간의 갈등	0.571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갈등	0.713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	0.704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개발과 환경보존 간의 갈등	0.688				
	사회갈등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고령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	0.687	0.863	0.721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남자와 여자 간의 갈등	0.762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갈등	0.761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	0.740				

포용	소수자 포용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1) 장애인	0.874	0.817	0.757	1: 받아들일 수 없음 4: 나의배우자가 되는 것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2) 조손/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0.878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3)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0.817			
	계층 이동성	나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0.897			
		나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0.897			

Abstract and Key Words

The Influence of Government Capacity on Perceived Social Safet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Integration

Yoon, Kun
Hanshin University
Kim, Chulwoo
Gach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verify the influence of government capacity on social safety, and whether social integration actually mediates between the two variables. To this end, data from the 2019 social integration survey were us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Korean residents aged 19 to 69 years old, and 8,000 samples were collected by systematic sampling.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capacity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safety, and that the social integration has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capacity and social safet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integration was found in trust, participation, connectivity, identity, citizenship, and class mobility, but not in minority inclusion and conflict. In addition, in the case of participation, negative mediation appeared. Government capacity showed a positive effect on participation, but participation negatively affected social safety.

[Key Words: government capacity, social safety, social integration, social risk]